

[산업경제]

지방투자보조금,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확 바뀐다 -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

앞으로는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투자액'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투자액' 과 '고용창출 규모' 를 함께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 따라서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게 된다.
- 보조금 지원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함께 포함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 * 지원 저조지역에 대해 국비 매칭비율 및 기업 지원 비율 5%p 추가지원
 - * 지원 저조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조금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제도개편 시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 △지역별 보조금 先배분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그간 보조금 지원이 미미했던 지역에도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 * 지원 금액('10 → '11, 억 원) : 부산(0 → 78.2), 광주(3.9 → 65.3), 대구(0 → 53.5), 경북(1.9 → 130.6)

○ 그러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중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금번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충남·충북·강원 집중률 : ('10)57.5% → ('11)40.7%

○ 또한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

○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지역	10%	10%

지역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지역	10%	10%	10%

* 기업당 투자지원 비율은 지방투자금액에 적용한 비율

이러한 지원기준은 한편으로 지역 내의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 지역 내의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별 지원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투자유치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별 투자유치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별 투자유치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참고문헌: 2011년 10월 10일 경제기획위원회 (주)

경제기획위원회(주) 2011년 10월 10일
경제기획위원회(주) 2011년 10월 10일

2011년 10월 10일
2011년 10월 10일

2011년 10월 10일

2011년 10월 10일